

'전주사랑콜' 새해부터 달린다 "전라도 천년사" 역사 왜곡 중단해야

전주시, 전화콜 기반 택시호출앱... 호출료 없어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호출료가 없어 택시 운수종사자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전주형 택시호출앱이 2024년 새해 첫날부터 가동된다.

전주시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플랫폼의 시장 잠식으로 인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비한 택시호출앱인 '전주사랑콜'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호출료가 없어 택시 운수종사자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전주형 택시호출앱이 2024년 새해 첫날부터 가동된다.

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호출앱 구축을 추진해 왔다.

정식 출시를 앞둔 전주사랑콜은 전화로도 택시를 호출할 수도 있어 정보취약계층 등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전주사랑콜 이용 시 사용자의 편의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주사랑상품권과도 연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사랑콜 사용자는 전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10%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리 앱에 카드를 등록할 경우에는 탈 때마다 직접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다.

전주사랑콜은 또 시민들의 편리하고 신속한 택시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자동결제 기능 △호출료 무료 △근거리 배차 등은 물론, 늦은 밤 택시 승차 등 경우 차량번호와 기사 정보 등을 지인에게 발송하는 안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갑작스러운 해를 맞아 처음 시행되는 공공형 택시 통합호출앱 '전주사랑콜'이 빠른시일 내에 정착해서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시민들께서도 전주사랑콜이 전주를 대표하는 택시호출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법 개정 김제 용지면 축산밀집 지역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촉구

전북지역 시·군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는 '전라도 천년사'의 역사 왜곡 중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법 개정, 김제시 용지면 축산밀집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추가 지정과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전북 특별자치도 외국인정책국 설치 등을 촉구했다.

'전라도 천년사'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건의안은 '일본서기' 기술을 차용하며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의 철저한 고증을 통해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편찬사업이 본래 목적인 호남 역사 집대성과 호남 정신 확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장이 제안한

'전라도 천년사'는 일본서기에 언급

되는 지명이 인용되는 등 식민사관에 서 벗어나지 못해 발간이 무기한 연장되고 갈등과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철저한 고증과 비판을 통해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전라도민에게 역사적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목적기부와 주소지 기부가 불가능하고 낮은 기부한도와 세액공제, 홍보방식 제한으로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시·군의회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목적기부와 주소지 기부 허용, 기부 한도 상향, 홍보규정 개선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제시 용지면 축산밀집 지역 2단계 매입사업 특별관리지역 추가 지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과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정책국 설치 촉구 건의안' 또한 채택했다.

협의회는 채택된 4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등 각각의 관계 기관에 보내 안전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원들이 전라도 천년사의 역사 왜곡 중단 등을 촉구했다.

전주시,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추진

전주시가 도심 속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과 공용텃밭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제공했다.

시는 올해 총 2억2,000만원을 투입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빈집 소유주 등의 신청을 받아 완산구 24곳과 덕진구 33곳 등 총 57개 빈집 중 총 11곳의 빈집을 정비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차장 조성 6개소 △공용텃밭 4개소 △단순 철거 1

개소 등이다.

이 가운데 공공용지로 조성된 10곳의 경우 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과 공용텃밭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는 증가한 인건비와 철거비를 반영해 기존 한 곳당 2,000만 원이었던 예산을 2,450만원으로 늘려 총 3억4,300만원을 투입해 빈집 14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앤아이씨, 이웃사랑나눔 성금 3억원 기탁

(주)앤아이씨(대표 김성률)는 21일 전주시를 찾아 전주시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이웃사랑나눔 성금 3억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주)앤아이씨의 임재현 회장과 김성률 대표, 유병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주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재현 (주)앤아이씨 회장은 "이번을 계기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전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예수병원 주니어 임상과장회 사랑의 연탄·등유 나눔 후원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지난 주말 주니어 임상과장회에서 '사랑의 연탄·등유 나눔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았다고 전했다.

작년부터 이어진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고 있는 예수병원 임상과장회는 전주연탄은행과 함께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연탄·등유 나눔 행사도 진행했다.

이날 특히 예수병원 직원 가족들도 동참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연탄과 등유를 전달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정연구원' 공식 출범

지속 가능 도시구현 위한 정책개발·연구사업 추진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21일 시정연구원 청사(대우빌딩 3층)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시의원과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전주시정연구원의 뜻깊은 출발을 알리는 개원식을 개최했다.

여는 전주시의 큰 꿈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이다.

시는 시정연구원을 통해 전문성 있는 지역발전 전략 수립 및 사회·경제·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추진해서 시민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정연구원 설립은 천년 미래를

행정과 미래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전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65만 전주시민의 꿈을 견인하게 될 정책연구기관인 전주시정연구원이 공식 출범했다.

'경영전략실'과 경제산업·사회문화·도시교통 등 분야별 연구를 수행하는 '시정연구실'로 조직을 만들었다. 전주시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시정의 주요 현안부터 대형 국책에 이르는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시정연구원은 또 사회·경제·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참여 기반 문제해결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책을 제시하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연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전주시정연구원이 전주의 천년 미래를 견인해 나갈 정책발굴과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방 최고의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범 소감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정연구원의 정책과 연구 성과들이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첫발을 내딛는 시정연구원이 꾸준한 발전을 이뤄내 시민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핵심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